

#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상향

여야,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정부 고유가 대응 여력 확보  
근로자 경제적 부담 완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시스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재석 248명, 찬성 197명, 반대 16명, 기권 35명으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재석 247명, 찬성 209명, 반대 10명, 기권 28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45명, 찬성 24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다.

두 가지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고 전날(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유류세를 구성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세의 인하폭이 늘어

나면서 최대 인하 범위는 기존 37%에서 55%로 확대된다. 고유가에 직면한 대한민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유가가 폭등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

류세를 20% 인하했으나 효과가 유가 오름세로 상쇄되자 지난 5월 1일 유류세 인하 폭을 역대 최대 수준인 30%로 확대했다. 이후 좀처럼 기름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법정 인하 최대 폭인 37%로 인하했다. 추후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 폭인 55%까지 인하한다면 보통휘발유 기준, 리터 당 148원이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다만, 최근 유가가 안정된 상황 세수 감소를 고려하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유가 통계를 제공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주간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올해 6월 5주차에 2137.65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후, 유류세가 37%로 최대 폭으로 인화된 7월 한 달 동안은 내림세를 기록해 7월 4주차에 1937.71원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점심값 1만원' 시대에 직면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줄 전망이다.

소득세법은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나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2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식비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4년 10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한 달에 20~25일 가량 근무하는데, 월 10만원의 식비는 한끼 평균 4500~5000원 정도이고, 월 20만원으로 식비가 인상된다면 한끼에 약 9000~1만원으로 올라 식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취학연령 하향 논란에 “공론화 출발 단계, 지혜 모아달라”

대통령실 “여러 장점 있는 개혁방안  
정책적 해결방안 찾도록 노력”

대통령실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 반감이 더 클 경우 백지화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지금은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는 출발 단계”라며 이같이

이 말했다.

안 수석은 “교육개혁은 인재양성 다양화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교육 외 돌봄의 국가책임 부분으로 크게 구성된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평생교육 훈련 등이 첫 번째에 속하고, 적어도 초등교육과 돌봄의 통합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게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시설 및 기자재가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에 육박해 이를 활용한 학교 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하자는 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방향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취학연령 하향은 방과 후 돌봄 등 다른 개혁 과제들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어 뭉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대안은 되겠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듀케어 전환, 아동 교육과 돌봄 통합운영은 국가책임”이라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부모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적 목표”라고 부연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바 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개혁도 국회 입법 사안이기에 때문에 대통령과 내각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

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해 교육부가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은 교육부의 몫”이라며 “개혁방안에 문제 인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와 국민과의 소통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우선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그러면서 “국민도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모두를 위한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함께합니다

시범사업 기간 2022. 7. 4 ~ 2023. 6. 30.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054-280-4170  
대표번호 1577-1000



###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를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